

이달의 초점

사회복지지출의 현황과 과제

OECD SOCX 2025를 통해 본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 과제

|신정우|

사회복지지출과 재정 부담 지표: 인구 고령화 관점에서 본 국제 비교와 시사점

|이영숙|

보건 분야 사회복지지출(SOCX)의 규모 및 구성: 의료보장제도와의 관계

|김희년·정형선|

OECD 사회복지지출 중 가족 영역 분석 및 재정추계

|나원희|

OECD 주요국의 공·사 연금 구조 변화

– OECD 사회복지지출(SOCX)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비교와 진단 –

|이다미|

순사회복지지출과 순조세효과로 본 복지국가의 실질 규모와 재분배:

OECD 사회복지지출(SOCX)을 중심으로

|최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OECD SOCX 2025를 통해 본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 과제

Social Expenditures and Policy Challenges as Seen Through
the OECD SOCX 2025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2025년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SOCX 자료에 의하면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로 집계되었다. 이는 OECD 국가(평균 22.1%)의 약 70% 수준으로, 복지재정 투입 규모에서 여전히 다른 OECD 국가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정책 영역별로 살펴보면 실업, 주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중을 기록했으나, 연금과 가족 복지 부문에서는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2011~2021년 GDP 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연평균 7.6% 증가했는데, 팬데믹 기간에는 그 수준이 급격히 확대됐다. 이는 단기간에 복지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었음을 의미하지만,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한 일시적 대규모 자원 동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 재정적 측면에서 과제도 남겼다. 향후 노령 및 가족 복지 강화, 민간 부문 역할 확대, 생산적 복지 전환이 필요하다. 더불어 복지지출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1 들어가며

2025년 4월 OECD는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였다. SOCX는 불리한 복지 환경에 처한 가계와 개인에게 제공되는 현금급여 및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사회지출

에 대한 국제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국내에서는 보통 ‘사회복지지출’로 불린다(신정우, 2025). 한때 명칭을 원어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신정우, 2024),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오랜 기간 관리되어 온바 용어 변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용어와 무관

하게 SOCX가 질병, 장애, 노령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용되는 복지제도 규모를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이다.

복지정책의 국가 간 비교는 단순 예산 총액이나 지표 대조를 넘어 각국의 정책 선택, 사회적 요구, 역사적 맥락 등 복합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고차원적 문제이다. 국민 삶의 질, 경제 안정성, 사회적 포용과 직결되는 복지정책의 특성상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장기 시계열을 갖춘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은 필수적이다. OECD SOCX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며 회원국 간 사회지출(이하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구조를 표준화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실상 유일한 장기 시계열 통계로 자리 잡았다(Adema et al., 2021).

또한 SOCX는 유럽통합사회보호통계(ESSPROS) 체계를 토대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요 유럽 국가와도 폭넓은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sping-Andersen(1990)은 복지국가의 분배 메커니즘과 정책 구조가 국가별로 다양하므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비교 지표 개발이 현대 복지국가 연구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교할 수 있고 신뢰도 높은 통계'는 복지정책 발전과 평가의 토대이자 국제적 벤치마킹의 전제 조건이다. 복지국가 발전론에서 후발 복지국가의 경로 의존성과 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각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이 복지제도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 왔다(Pierson, 2000).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현황을 국제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특성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더불어 사회복지제도의 규모와 내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5배 이상 증가했으나, 복지 수요가 다변화되고 영역별 요구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회·경제적 충격은 복지정책의 효과성, 대응력, 포괄성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한층 더 높였다. 이 글에서는 OECD (2025)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변화를 분석하고, 국제 비교 결과 통해 미래 복지정책의 방향을 살펴본다.

2 2025년 SOCX DB의 특징

올해 4월 OECD는 SOCX의 장기 시계열과 국가별 상세 데이터를 업데이트했다. 1980년부터 2021년까지의 확정치 통계와 2022년 잠정 추정치가 공개됨으로써 사회복지지출 변화를 팬데믹 전후로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팬데믹 대응 정책이 각국의 사회복지지출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 비교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성과이다. 40년 이상의 장기 시계열 데이터는 복지국가 발전의 장기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단순한 연도별 비교를 넘어 복지제도의 구조적 변화, 경제위기나 사회적 충격에 대한 각국의 정

책 대응 패턴, 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한국은 1990년부터 SOCX 통계를 공식 제출해 왔으며, 매년 자료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OECD의 국가별 정보 및 메타데이터에 따르면¹⁾ 한국은 2020~2021년 팬데믹 시기부터 기존의 사회보험·공공부조 항목 외에도 재해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문화·교통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법률구조, 미지급 임금 지원 등 7개 세부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다. 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급여를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대상자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복지정책의 범위와 효과성 평가에 대한 한층 정교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계를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2020년부터 적용되어 시계열적 단절이 있지만, 최신 통계 정보는 영역별 지출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부 항목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켰다.

SOCX 체계는 노령(old age), 유족(survivors), 근로무능력(incapacity-related benefits), 보건(health), 가족(family),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실업(unemployment), 주거(housing), 기타 분야(other social policy area) 등 9대 정책 영역별로 세부 집계를 한다.²⁾ 각 영역은 공공과 민간을 구분

하고, 현금과 현물서비스를 구분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분류체계는 단순 지출 총량을 뛰어넘어 각 국가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식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준다. 순사회복지지출(net social expenditure) 개념을 통해 세금과 사회 기여금의 영향을 고려한 실질적인 복지 혜택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3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국제 비교

2021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338조 2000억 원으로 GDP 대비 15.2%이다. 이는 OECD 국가(평균 22.1%)의 69.0%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하위권에 속한다.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는 상당하다.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핀란드(31.0%), 이탈리아(29.8%), 벨기에(29.1%)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대부분 25% 이상의 높은 지출을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 일본은 25.4%로 OECD 평균을 넘어섰고, 호주도 18.1%로 한국보다 2.9%포인트 높다. 한편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지출 규모를 보이는 국가는 콜롬비아(15.7%), 아일랜드(13.6%), 코스타리카(12.7%)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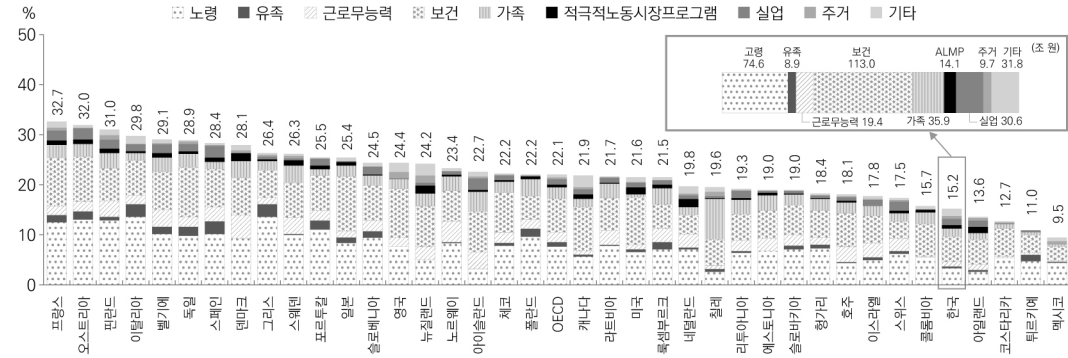
공공사회복지지출을 9대 정책 영역별로 분석하

1) OECD. (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social-expenditure-database-socx.html>

2) 각 정책 영역의 개념은 신정우. (2025). OECD 사회복지지출 현황 비교 분석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1]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2021년)

(단위: US\$ PPP)



출처: "OECD Data Explorer", OECD, 2025, <https://data-explorer.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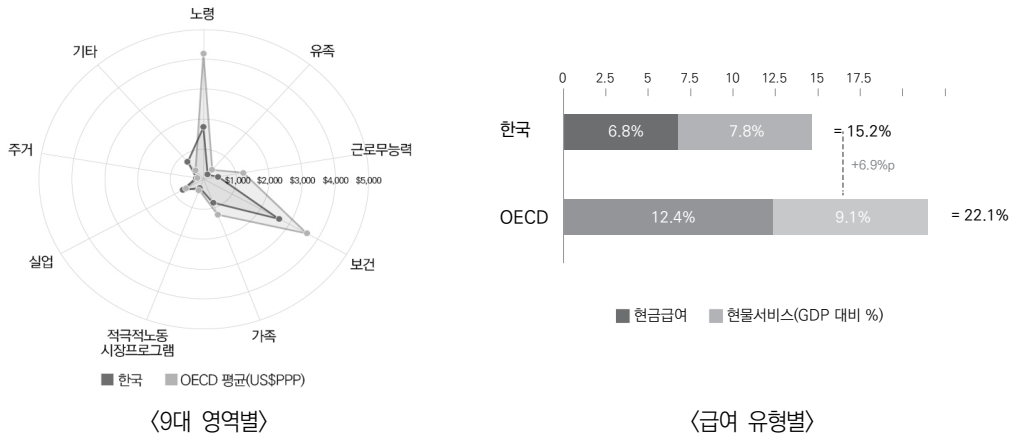
면 뚜렷한 구조적 특징이 드러난다. 2021년 기준 보건 분야가 113.0조 원(GDP 대비 5.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노령 74.6조 원(3.4%), 가족 35.9조 원(1.6%)의 순서이다.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66.0%를 차지한다. 정책 영역의 구성비를 OECD 평균과 견주어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지출 구성비가 높은 분야는 실업, 주거, 적극적 노동시장, 기타 사회정책 영역이다. 이는 주로 단기적이고 위기 대응적 성격이 강한 분야들이다. 특히, 실업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디지털 뉴딜 일자리 창출 등이 복지 예산 증가를 주도했다. 2020년과 2021년 연속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은 한국의 복지 제도가 위기 대응 유연성을 발휘한 것을 입증한다.

주거 분야도 최근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청년 전 월세 보조금, 신혼부부 임대주택, 저소득층 공공임

대주택 확대 등을 통해 OECD 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한국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청년층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결과로 해석된다. 기타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2020년부터 새롭게 포함된 7개 세부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재해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 문화·교통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법률구조, 미지급 임금 지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특수 상황의 현금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되었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반면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분야는 노령, 가족, 유족, 근로무능력 영역이다. 이들은 모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이다. 노령 분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지급 규모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국민연금제

[그림 2] 공공사회복지지출의 9대 영역별, 급여 유형별 구성비



출처: "OECD Data Explorer", OECD, 2025, <https://data-explorer.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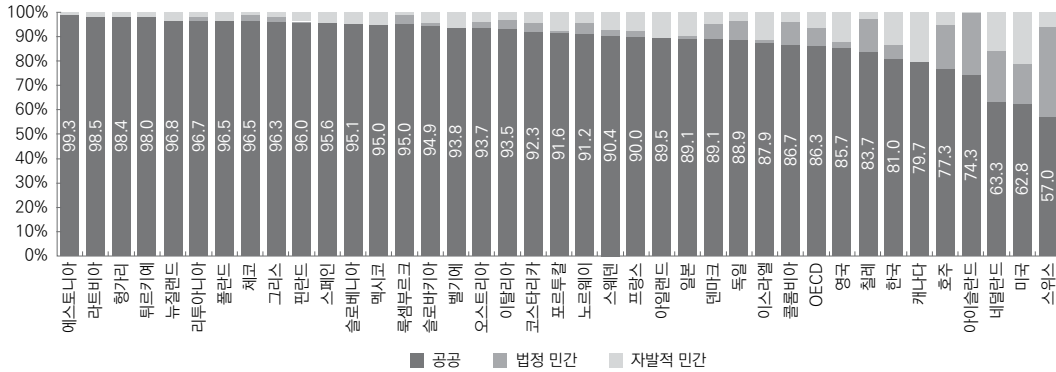
도의 상대적 후발성과 기초연금의 제한적 수준에 기인한다. 가족 정책 분야는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아동수당 도입과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족 관련 지출 비중은 GDP 대비 1.6%로 OECD 평균(2.3%)의 약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공복지사회지출을 급여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현금급여(재난지원금 포함)와 현물서비스가 각각 44.4%, 55.6%로 비교적 균형을 이룬다. 이는 현금급여 비중이 70% 이상인 그리스, 폴란드, 이탈리아 등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비록 2021년에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어서 현금급여의 비중이 높았지만, 상시적으로는 보건 분야에서 건강보험을 통한 현물급여 비중이 높다. 보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확대가 현물서비스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균

형은 한국의 복지제도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 지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돌봄서비스 정책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복지 재원은 압도적으로 공공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사회복지지출 중 약 81.0%가 공공 재원으로 조달되고, 민간 지출은 19.0%에 그친다. OECD 국가의 평균인 86.3%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스위스(43.0%), 미국(37.2%), 네덜란드(36.7%) 등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큰 것과 대조된다. 한편 법정민간지출이 법정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등 제한된 범위에 머물러 있어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 가능성이 크다. 향후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 of 다층화를 추진할 필요도 있다.

[그림 3] OECD 국가의 총사회복지지출 재원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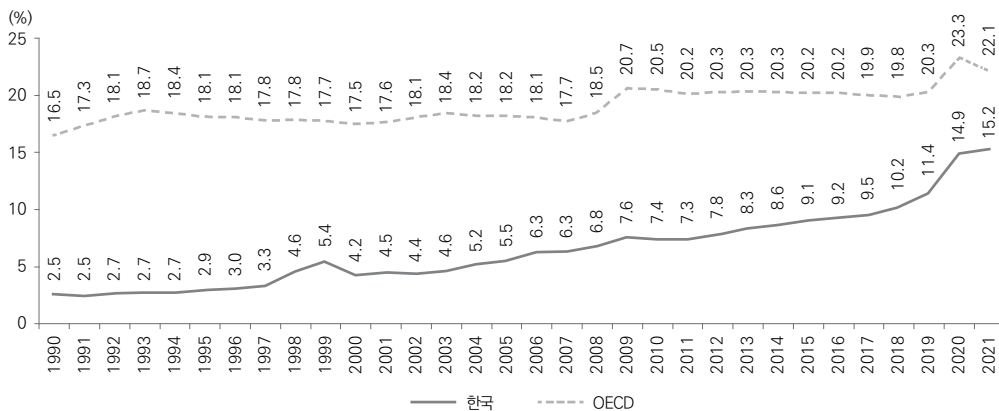
출처: "OECD Data Explorer", OECD, 2025, <https://data-explorer.oecd.org/>

4 사회복지지출의 변화 추이와 특징

한국 복지정책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많은 복지 국가가 10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구축한 복지 제도를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압축적으로 건

설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압축적 복지국가' 형성 과정은 뚜렷한 시기별 특징을 보인다. 1997년 외 환위기는 한국 복지제도 발전의 결정적 전환점이었 다. 경제위기로 인한 대량 실업과 사회불안은 기존 의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의

[그림 4]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1990~2021년)



출처: "OECD Data Explorer", OECD, 2025, <https://data-explorer.oec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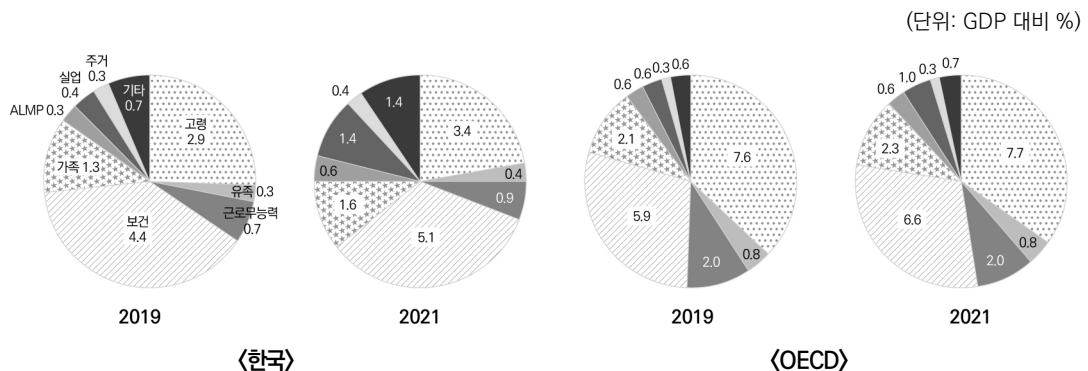
패러다임 전환을 촉발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년), 건강보험 통합(2000년), 국민연금 확대(1999년) 등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거나 개혁되었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1997년 3.3%에서 2007년 6.3%로 급증했다. 이는 연평균 6.8%의 증가율로, 같은 기간 변화가 없었던 OECD 평균과 크게 구별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은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기초노령연금(2008년), 4대 보험 적용 확대, 아동수당(2018년) 등이 도입되면서 복지 대상이 크게 늘었다. 이 시기 사회복지지출은 2008년 GDP 대비 약 6.8%에서 2019년 약 11.4%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4.8%로 OECD 평균 0.8%를 크게 상회한다. 특히 2017년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정책으로 복지지출이 더 가속화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 복지제도의 새로운 전

환점이 되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현금지원이 처음 도입되었고, 긴급돌봄, 고용유지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었다. 2019년 대비 2020~2021년 사회복지지출 증가는 복지제도의 높은 적응력과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평상시 현금 복지제도의 상대적 취약성도 반증했다. 2020년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인당 40만 원)과 이후 추가 지원금은 한국 복지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보편적 현금지원이었다. 총 약 60조 원 규모의 현금지원이 이뤄졌는데, 연간 복지 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였다. 이는 대체로 ALMP, 실업, 기타 영역에서 지출되었다. 이로써 ALMP는 2019년 GDP 대비 0.3%에서 2021년 0.6%로, 실업은 0.4%에서 1.4%로, 기타는 0.7%에서 1.4%로 크게 늘었다. 물론 다른 OECD 국가도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출을 늘렸지만, 한국과 같이 세 영역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

[그림 5] 공공사회복지지출의 9대 구성비 변화(2019년, 2021년)



출처: "OECD Data Explorer", OECD, 2025, <https://data-explorer.oecd.org/>

지는 않았다.

이러한 경험은 한국 사회에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각인시켰다. 신속한 지급과 높은 정책 만족도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행정안전부 2020; 여유진 외, 2021),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한국은 위기 상황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 체계를 상당히 제도화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돌봄 공백 해소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이 마련되었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평상시 제도로 전환되었다. 특히 고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상병수당 시범 사업, 돌봄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논의가 팬데믹을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다만 상병수당 도입과 돌봄서비스 확충은 진전을 보였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은 제도 설계 및 재원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도재형, 2022; 안수란, 2024; 보건복지부, 2025).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25년 4월에 공표된 OECD SOCX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복지지출의 국제적 위치와 정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21년 기준 GDP 대비 15.2%로 OECD 국가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둘째, 정책 영역별로 실업, 주거,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분야는 OECD 평균을 상회하나, 노령, 가족, 유족, 근로무능력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사회보장 분야는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복지제도는 ‘압축적 성장’이라는 강점과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 준 높은 적응력과 위기 대응 능력은 한국 복지제도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노령과 가족 등 구조적 사회보장 영역의 체계적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영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애주기 전반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바 향후 노령 관련 지출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3.4% 수준인 노령 지출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연금 지출만 봐도 2050년에는 GDP 대비 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22). 동시에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복지 재원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2021년 현재 약 4.6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40년에는 약 2.0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노령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의 단계적 확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가족정책에서는 현금지원과 서비스 지원의 효율적 조합을 통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단기 위기 대응에서 보여 준 유연성과 혁신성을 평상시 복지제도 운용에도 접목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이 중요하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구축된 신속한 현금 지급 시스템과 온라인 복지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평상시에도 국민이 쉽고 빠르게 복지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복지국가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2025년 2월 OECD 사회장관회의를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보건 실무 협의체 등 연이어지는 국제 정상들의 모임은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복지 정책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셋째,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지출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혁신적인 사회정책 실험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가 중요하다. Bonoli와 Natali(2012)는 21세기 복지 국가가 전통적인 소득 보장 기능을 넘어 사회 투자적 접근을 통해 인적자본 개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 역시 단순한 지출 확대를 넘어 사회적 포용과 정책 효율성,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성숙한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더불어 Castles et al.(2010)이 강조한 복지국

가의 적응력과 회복력 개념은 한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 보여 준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대응은 이러한 적응력의 실제적인 구현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체계화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국이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OECD SOCX처럼 국제 표준 데이터에 기반한 지속적인 국제 비교와 정책 혁신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복지지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복합적인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함으로써 이제까지 이룬 압축적 복지 확대의 성과를 토대로 한층 더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

참고문헌

- 도재형. (2022). 사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방안 -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26(4), 123-150.
- 보건복지부. (2025). 2025 상병수당 시범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act=view&list_no=1486630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산출 결과보고서-2020/2021년 확정치**.
- 신정우. (2024). 2024년 사회보장재정 데이터 관리 정책 현안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27, 55-63.
- 신정우. (2025). OECD 사회지출 현황 비교 분석. **보건**

- 복지포럼, 341, 4-14.
- 안수란. (2024). 2024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27, 39-54.
- 여유진 외. (202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소득」의 효과 평가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행정안전부. (2020).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https://blog.naver.com/mopaspr/222002721613>
- Adema, W., Fron, P., Ladaïque, M., & Queisser, M. (2021).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Measuring Trends in Social Spending* (OECD Social Policy Papers, No. 35). OECD Publishing.
- Bonoli, G., & Natali, D. (2012). *The Politics of the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Castles, F. G., Leibfried, S., Lewis, J., Obinger, H., & Pierson, C. (2010).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ECD. (2022).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Korea, 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s*. OECD Publishing.
- OECD. (2025). *OECD Data Explorer Homepage*. <https://data-explorer.oecd.org>
- OECD. (n.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social-expenditure-database-socx.html>
- Pierson, P. (2000).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Social Expenditures and Policy Challenges as Seen Through the OECD SOCX 2025

Shin, Jeongwoo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ccording to the latest OECD SOCX update announced in April this year, Korea's public social expenditure as a share of GDP was 15.2 percent in 2021. This figure, representing about 70 percent of the OECD average of 22.1 percent, indicates that a significant gap in overall welfare expenditure remains between Korea and other OECD countries. In some policy areas—such as unemployment, housing, and active labor market programs—Korea spends more than the OECD average, whereas in pensions and family benefits, its social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is substantially lower than that of other OECD countries. Korea's social welfare expenditure has increased at an average annual rate of 7.6 percent from 2011 to 2021, growing especially rapidly in the wake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reflects a remarkable expansion of the social welfare infrastructure in a relatively short span of time. Yet, challenges remain in mobilizing resources on a large scale for emergency responses and in ensuring stable funding for continued service provi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Korea's welfare system requires a shift toward greater support for old-age and family-related programs, enhanced private-sector involvement, and policies that promote productivity through welfare. Welfare expenditure should be viewed not as a cost, but a driver of future growth as Korea pursues the goal of an inclusive, sustainable welfare state.